

부 의 안 건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9
----------	-----

제출연월일 2023. 1. .

제출자 고양시장

(기획조정실장)

□ 제안이유

-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직제 순에 맞추어 소관부서 및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순서를 직제 순으로 조정함(안 별표 1 및 별표 2).

구분	변동내역
직제 순서	[도시디자인담당관] → [감사관] → [시민안전담당관] → [재난대응담당관] → [행정지원과] → [인적자원과] → [민원여권과] → [일자리정책과] → [소상공인지원과] → [세정과] → [복지정책과] → [가족정책과] → [노인복지과] → [장애인복지과] → [아동보육과] → [환경정책과] → [기후에너지과] → [자원순환과] → [식품안전과] → [문화예술과] → [관광과] → [체육정책과] → [도시계획정책관] → [주택과] → [건축정책과] → [토지정보과] → [교통정책과] → [주차교통과] → [도로정책과] → [도시개발과] → [농업정책과] → [농산유통과] → [녹지과] → [생태하천과] ※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디자인담당관 등 34개 부서 순서 변경
과 신설	1. 도시디자인담당관 2. 인적자원과
과 폐지	1. 녹색도시담당관 2. 찾아가는복지과
명칭 변경	1. 여성가족과 ⇒ 가족정책과 2. 아동청소년과 ⇒ 아동보육과 3. 시민안전과 ⇒ 시민안전담당관 4. 재난대응과 ⇒ 재난대응담당관 5. 철도교통과 ⇒ 교통정책과 6. 도시정비과 ⇒ 도시개발과 7. 건축디자인과 ⇒ 건축정책과

나. 부서 간 조정에 따른 위임사무 내용 및 근거법규를 정비함(안 별표 1 및 별표 2).

다. 인용 법령 및 용어 등을 현행화함(안 별표 1 및 별표 2).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1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9조, 제10조부터 제10조의3까지,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및 제20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제23조, 제29조, 제37조,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0조의2, 제39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및 제30조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6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66조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23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및 제15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8조까지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7조 및 제8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20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3조, 제78조부터 제84조까지, 제88조 및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9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6조 및 제37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5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및 제28조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53조, 제55조, 제72조, 제72조의2 및 제73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33조 및 제141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생략함.

☐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23. 1. 27. ~ 2023. 1. 30.(3일간) (의견없음)

☐ **부서협의 사항**

- 협의기간 : 2023. 1. 18. ~ 2023. 1. 30.
-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 별첨 2

- 현행 조례

□ 경기도 관련부서 : 기획담당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획정책관
입안자	정책관 성명	기획정책관 윤경진
	팀장 성명	조직제안팀장 김문식
	담당자 성명·전화	이홍규 (031-8075-2395)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도시디자인담당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 관련 허가·신고 및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공공기관의 공공 목적 광고물을 포함한다) 2.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3.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5.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의 취소 6. 허가, 신고,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 및 변경, 휴업 등 신고에 관한 사항 8. 옥외광고사업 손해배상 책임보험의무가입에 대한 관리 및 조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23조, 제29조 ・ 같은 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5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11조,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 같은 법 제10조의4,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5조

[감사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구 및 동 감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자체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속 공무원의 주의요구(경고 · 훈계 · 주의)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양시 감사 규칙」 제21조

[시민안전담당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민방위 편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민방위대 운용에 관한 동장 지휘·감독 권한 2. 직장민방위대 편성, 개편, 해체, 이전, 명의변경 3.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및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2. 민방위대 지휘 감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관내 직장민방위 대장의 감독 2. 민방위대에 대한 정기검열 및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기본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3. 민방위 교육 및 훈련	1. 직장민방위 대원의 교육 통지서작성 및 전달 2. 직장민방위 대원 및 기술 지원대의 교육훈련 면제 대상자 승인, 교육 불참자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4. 민방위 관련 과태료 부과	1. 민방위대 신고의무 및 교육·훈련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제39조

[재난대응담당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진화, 수방, 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2.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그 밖의 질서유지 3.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필요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2.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사항	1.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지 관리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행정지원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p>1.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2. 청원경찰 배치</p>	<p>1. 연가계획 및 허가</p> <p>2. 병가 및 공가 허가</p> <p>1. 청원경찰 근무부서 배치</p>	<p>•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p> <p>•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제7조의6</p> <p>•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6조</p>

[인적자원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6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 전보 (구간 전보 제외) 2.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 전보,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징계(다만, 구간 전보 및 6급과 동일 건으로 관련된 7급 이하의 징계, 구를 달리하는 7급 이하의 징계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같은 법 제6조

[민원여권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2. 행정사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행정사 업무(변경) 신고	· 「행정사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2. 행정사업의(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3. 합동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 이전 신고	· 같은 법 제10조, 제1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4. 행정사업의 지도·감독	·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5.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8조

[일자리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국내 유료직업 소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2.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3.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 4.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현황 보고 5.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지도·단속 및 보고 6.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과태료 부과·징수	· 「직업안정법」 제19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 같은 법 제50조

[소상공인지원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담배 소매인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담배 소매인의 지정 2. 담배 소매인의 지정 취소 3. 담배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4. 담배 소매업의 휴·폐업 등의 신고	• 「담배사업법」 제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같은 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2.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신고, 변경, 휴·폐업 등) 2.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3. 직권말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같은 법 제48조, 제66조 • 같은 법 제12조

[세정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가격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2. 개별주택가격 검증 3. 주택소유자 등의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4. 주택소유자 등의 이의신청 접수·재조사 및 가격 산정 5. 개별·공동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복지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활보장에 관한다음의 권한	1.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보고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 교육, 장제, 해산) 지급 3. 보장비용의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23조 • 같은 법 제9조 및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17조, 제18조 • 같은 법 제46조
2.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및 사후관리 2. 의료급여증 발급 및 변경, 재발급 3.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대불 및 대지급금 상환·독촉 4. 본인부담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 「의료급여법」 제23조 •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	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활동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4. 긴급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긴급지원대상자 신청·접수 및 사후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8조,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2. 긴급지원대상자 급여(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 해산, 장제, 전기요금) 지급 및 보장비용의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6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5. 노숙인 등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6.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자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및 제23조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자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가족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한부모가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한부모가족 조사보고 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3.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노인복지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노인건강진단 실시 2. 경로사업(기초생활보장노인 월동난방비지원 등)의 실시 지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변경·휴지·폐지 신고 및 사업정지 등 명령 (노인복지관 업무 제외) 4. 기초연금(미지급연금 포함)지급 및 부당이득 환수(승인, 결정 사항 제외) 5. 효수당 지급 및 변경, 부당이득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법」 제27조 · 같은 법 제4조 · 같은 법 제37조제2항, 제40조제3항, 제43조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기초연금법」 제14조, 제15조, 제19조 · 「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2.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변경, 폐업), 사업자 등록 현황 자료 유지·관리 2. 장례식장 영업에 대한 정비, 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권한 3. 장례식장 행정 처분에 관한 권한 4. 장례식장에 대한 검사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의4 ·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제4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4조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무연고시체 등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4.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폐지 등 2. 노인의료복지시설 감독 3. 노인의료복지시설 사업 정지 등 4. 청문 5.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법」 제40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61조의2
5.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폐지 등 2. 재가노인복지시설 감독 3.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 정지 등 4. 청문 5.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법」 제40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61조의2
6.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장기요양기관의 변경 및 갱신 2.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3. 장기요양기관 보고 및 검사 4. 청문 5.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처분 6. 과태료 7. 과징금 8.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 제33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제63조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37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7.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변경·폐지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감독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정지 등 4. 청문 5.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법」 제40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61조의2

[장애인복지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장애인 보호관리	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보장급여(장애수당, 도비 장애수당, 장애 아동부양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지급 3.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체납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 같은 법 제6조, 제38조, 제49조, 제5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8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아동보육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아동 등에 대한 조사 2.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의 지원 3.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4. 보조금의 반환명령 5. 아동수당에 관한 조사, 질문, 지급, 정지, 환수, 과태료 부과·징수, 고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 제66조 • 「입양특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 • 「아동복지법」 제59조 • 「아동복지법」 제61조 • 「아동수당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6조 등
2. 보육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어린이집에 관한 다음의 사항 (국공립어린이집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인가에 관한 사항 (설치·변경인가 등) - 보육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비용의 보조 등 - 어린이집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 어린이집 지도와 명령 - 어린이집 보고와 검사 -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등 신고 - 어린이집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어린이집의 폐쇄 등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2.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 같은 법 제19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같은 법 제34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료 자격 책정 및 관리 - 가정양육수당 자격 책정 및 관리 -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급식협력업체 지정 및 관리 2. 급식비 지원 및 정산 3. 급식업체(지역아동센터 포함) 지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6조
4. 어린이집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 2. 사고조사 등 3. 보고·검사 등 4. 과태료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31조

[환경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토양환경보전법」 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2.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3. 손실보상 4.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신고 5. 토양오염 검사의 통보 등 6. 토지이용 등의 제한 7. 명령 불이행자의 대집행 8. 과태료 부과·징수	・ 「토양환경보전법」 제7조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32조

[기후에너지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악취방지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2.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3.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4.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징금처분 5.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6.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에 대한 개선권고 및 개선권고 미이행에 따른 조치명령 7. 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 「악취방지법」 제10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30조
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생활소음·진동 관련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명령 2. 폭약사용의 필요사항에 따른 조치명령 3. 교통소음 및 진동규제 지역 내의 자동차운행 규제 요청 4.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 내의 방음시설 설치 요청 5. 운행차의 수시점검, 면제, 원인의 소명 6. 운행차의 개선 및 사용정지	•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25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28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명령·통행규제 7. 과태료 부과·징수 8. 특정공사 사전 신고 9. 이동소음원에 대한 규제 10.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권한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과태료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44조, 제48조, 제57조 및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수리 2. 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과태료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 같은 법 제15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5.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도시가스 특정 사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 제29조

[자원순환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관리 및 공급 (공공용쓰레기규격봉투에 한한다) 2.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및 취소 3. 폐기물관련 각종 수수료 부과·징수 4. 폐기물 불법행위 적발 및 처리 5.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업무 6.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7. 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 수리 8. 생활폐기물의 처리 (보행자전용도로를 포함한 가로청소에 한한다)	·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7조 · 같은 조례 제17조 · 같은 조례 제18조, 제19조 · 같은 조례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같은 법 제18조 ·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 등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명령 3.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필요한 조치명령 4.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보관 시설이나 용기 설치 등 필요한 조치 5. 빈용기의 재사용 촉진 6. 보고 및 검사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 같은 법 제9조제3항 · 같은 법 제12조의3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5조의2 · 같은 법 제36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p>3.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4.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p>	<p>7. 재활용 위반행위 적발 및 처리</p> <p>1. 감량의무사업장 신고</p> <p>2.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p> <p>1.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재산관리관이 지정된 공중화장실 제외)</p> <p>2. 개방화장실 지정</p> <p>3. 보조금 지급</p> <p>4. 보고 등</p>	<p>· 같은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p> <p>·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p> <p>· 같은 조례 제19조</p> <p>·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p> <p>· 같은 법 제9조</p> <p>· 같은 법 시행령 제8조</p> <p>· 같은 법 제16조</p> <p>· 같은 법 제19조</p>

[식품안전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식품접객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	1. 영업허가 신청 2.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신고)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4. 폐업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같은 법 제39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같은 법 제37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2. 그 밖에 식품위생업 중 시장에 대한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 (다만,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 공업은 제외)	1. 영업신고 2. 변경신고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4. 폐업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같은 법 제37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같은 법 제39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같은 법 제37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3. 집단급식소에 관한 사항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 3.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 같은 법 제88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 같은 법 제88조제6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4.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5. 행정처분, 청문, 과징금, 과태료 등	· 같은 법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8조부터 제84조까지,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 제101조, 제102조 · 「식품위생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허가, 신고 대상 식품위생영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식품위생영업소 지도·단속(정기 및 수시의 출입·검사·수거 등)	· 같은 법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8조부터 제84조까지,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2.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폐기처분, 공표, 개수명령,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및 폐쇄조치, 청문 등)	· 같은 법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8조부터 제84조까지,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3. 과징금·과태료 처분	· 같은 법 제101조, 제102조
	4. 부정·불량 식품의 지도·단속	· 같은 법 제4조
	5. 무허가·신고 식품영업(퇴폐, 변태 등)행위의 단속	· 같은 법 제79조
5. 그 밖에 식중독 등 식품위생 관련 추진업무	1. 식중독 발생 관리 및 음식문화개선(모범음식점) 등 각종 시책 관련 업무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86조, 제8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1조, 제6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93조
6. 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영업 신고 및 폐업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3조의3까지
	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 제3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7. 공중위생영업 위생지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중위생영업소 지도·단속 (보고 및 출입·검사)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8. 공중위생영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2.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3. 벌칙 4. 과태료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같은 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6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22조
9.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중이용시설의 개선명령 및 이행확인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10. 공중위생영업소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2. 위생관리등급 공표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11.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 업 영업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영업신고 2.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같은 법 제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같은 법 제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12.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 업 위생지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지도·단속(출입·검사·수거 등)	· 「위생용품관리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13.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	1. 시정명령 2. 폐기처분 등	· 「위생용품관리법」 제15조 · 「위생용품관리법」 제16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p>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3.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p> <p>4. 품목 등 제조정지</p> <p>5. 폐쇄조치 등</p> <p>6. 과징금 처분</p> <p>7. 위반사실 공표</p> <p>8. 벌칙</p> <p>9. 과태료</p>	<p>·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p> <p>· 「위생용품관리법」 제17조</p> <p>·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p> <p>·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p> <p>· 「위생용품관리법」 제18조</p> <p>· 「위생용품관리법」 제19조</p> <p>· 「위생용품관리법」 제22조</p> <p>· 같은 법 시행령 제9조</p> <p>· 「위생용품관리법」 제23조</p> <p>·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p> <p>· 「위생용품관리법」 제32조</p> <p>· 「위생용품관리법」 제34조</p> <p>· 「위생용품관리법」 제27조</p>
<p>14. 소비자위생용품 위생감시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1.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위·해측 등 관리</p>	
<p>15.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1. 유통 가공식품 및 식품위생업소(다만,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외)에 대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지도·단속</p> <p>2. 부당한 표시행위 및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회수 및 폐기처분, 영업정지 등, 청문)</p> <p>3. 과징금·과태료 처분</p> <p>4. 벌칙</p> <p>5. 위반사실 공표</p>	<p>·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p> <p>·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3조</p> <p>· 같은 법 제19조, 제20조, 제31조</p> <p>· 같은 법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p> <p>· 같은 법 제21조</p>

[문화예술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공연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연장업의 등록(변경) 및 등록증의 재교부 2. 재해예방 조치 3.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4. 공연장 등에 관한 지도·감독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폐기명령, 행정처분, 폐쇄조치, 증표휴대, 청문) 5. 벌칙(벌칙, 과태료, 양벌규정)	· 「공연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 같은 법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2. 출판사 및 인쇄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2. 폐업 및 직권말소 3. 과태료 부과·징수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 제2항제1호·제3호
3.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영화업자 신고, 변경신고 2. 영화업자 신고증 재교부 3. 영화상영관의 등록, 변경등록 4. 영화상영의 신고, 변경신고 5. 영화상영의 제한 6.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7. 영화상영관 영업 등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같은 법 제26조제3항 · 같은 법 제36조제1항 · 같은 법 제41조제1항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5조 · 같은 법 제46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승계신고	
	8.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의 신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변경신고·변경등록	· 같은 법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9. 비디오물제작업자·배급업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영업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 제63조
	10.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같은 법 제64조
	11. 비디오물제작업자·배급업자,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영업소 폐쇄 및 비디오물 수거 등 조치	· 같은 법 제67조, 제68조, 제70조
	12.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교육 및 모범적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지원	· 같은 법 제88조, 제89조
	13. 수수료 책정	· 같은 법 제90조
	14.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8조, 제99조
	1.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모범 게임제공영업소 지정 및 지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2.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 변경등록	· 같은 법 제25조
	3.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등록, 신고, 변경허가, 변경등록, 변경신고	· 같은 법 제26조
	4.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영업의 지위 승계신고.	· 같은 법 제29조
	5.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폐업	· 같은 법 제30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및 직권말소	
	6.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	· 같은 법 제31조
	7.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영업 폐쇄 등 행정조치(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영업폐쇄, 과징금 부과, 청문)	· 같은 법 제35조, 제36조 및 제40조
	8.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폐쇄 및 수거 등 조치	· 같은 법 제38조
	9.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8조
	1.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항
	3.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 같은 법 제18조
	4. 신고증·등록증 교부	· 같은 법 제20조
	5.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같은 법 제21조
	6. 폐업 및 직권말소	· 같은 법 제24조
	7. 등록취소, 청문	· 같은 법 제27조, 제30조
	8.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8조
	9.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 같은 법 제29조
	10.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6조

[관광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유원시설업	1.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2.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3. 그 밖의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4. 그 밖의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사항 변경신고 5. 벌칙 6. 양벌규정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 같은 법 제5조제3항 ・ 같은 법 제5조제4항 ・ 같은 법 제5조제4항 ・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 같은 법 제85조

[체육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상 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2.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3. 회원의 모집 및 보호 4. 시정명령 5. 행정처분 6. 청문 7.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8. 수수료 징수 9. 과태료 부과·징수 10. 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30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도시계획정책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지구단위계획구역 위반 건축물, 공작물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33조, 제141조
3.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1.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및 공작물 설치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같은 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7조 • 같은 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2.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허가	
	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4.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용도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증축, 개축 및 대수선, 임시시설허가 등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5.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1.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행위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0조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p>2. 불법행위에 대한 계고 및 고발</p> <p>3.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철거 등의 행정대집행</p>	<p>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제2조 및 제30조, 제30조의2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같은 법 제2조 및 제30조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6조

[주택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2.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육 제외) 3. 관리비 및 회계운영 4. 시설 관리(행위허가·신고, 사용검사 업무, 소방안전 및 방범교육 제외) 5.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6.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7.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등 (공동주택관리 감사 업무 제외) 8. 벌칙 및 과태료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같은 법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 같은 법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 같은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 같은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 같은 법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 같은 법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
2.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 2. 사고조사 등 3. 보고·검사 등 4. 과태료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31조

[건축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건축물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 사용승인 등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허가, 사용승인 (단,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 용도변경, 건축물 사용승인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2. 위반 건축물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 위반 건축물 및 대수선할 때의 조치(단 건축물의 냉방설비, 조경 유지관리 및 처분은 층수와 면적의 제한을 제외한다) 2.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 3. 무단용도 변경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및 단속 4. 예방단속 및 행정처분	• 「건축법」 제7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 「건축법」 제7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41조, 제79조, 제8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41조, 제79조, 제8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물대장 관리 및 작성 2. 기존 건축물 공부의 건축물 대장 이기 3. 건축물대장 발급 4. 등기촉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3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법」 제39조 · 「건축법」 제13조
4.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조치	1.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조치	
5. 건축물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신고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2.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업무 3. 용벽 등 공작물 축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14조 및 제16조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2 · 같은 법 제83조
6. 주상복합아파트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 2. 사고조사 등 3. 보고·검사 등 4. 과태료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31조
7.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1.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 · 관리 행정지도 2. 건축물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 점검 및 관리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3. 건축물의 해체허가·(신고) · 완료신고 및 멸실 4.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46조 ·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 같은 법 제9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8.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5.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계획 및 지원·관리 6. 빈 건축물 정비 7.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행정조치 1. 집합건물 관리 및 행정조치 (관리인선임, 회계감사, 분쟁조정, 고발 및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제40조, 제41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조의2, 제65조 및 제66조

[토지정보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토지 등의 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 2. 허가신청 토지에 대한 선매자 지정 및 통지 3.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4. 신고포상금 지급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제25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2. 국가 등의 행하는 토지거래 계약의 특례	1. 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3. 과태료	1. 토지 등의 거래에 관한 과태료 처분 및 징수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과징금 부과 및 징수 2. 이행강제금 부과 3. 위반사실 확인조사 4. 과징금 과오납금 환급 및 환급가산금 지급 5. 과징금 물납신청의 허가여부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 같은 법 제6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5.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2. 개별공시지가 검증 3.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4.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접수, 재조사 및 산정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교통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p>1. 교통유발 부담금부과·징 수사무에 관한 권한</p> <p>2.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 및 부과·징수</p> <p>1. 불법구조 변경차량 지도·단속</p> <p>2.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등록· 정비업, 매매업,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자, 폐차업 등에 관한 사항</p> <p>3.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p> <p>4.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p> <p>5. 자동차관리사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p>	<p>·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p> <p>·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p> <p>· 「자동차관리법」 제34조</p> <p>· 같은 법 제53조</p> <p>·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p> <p>· 같은 법 제55조</p> <p>· 같은 법 제53조</p> <p>· 같은 법 제72조, 제73조</p> <p>·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p>

[주차교통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주·정차 지도·단속 및 관련 업무	1. 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2. 전인대행업체 선정 및 관리 3. 그 밖에 주·정차 지도에 관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5조, 제161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같은 법 147조
2. 전용차로 지도·단속	1. 전용차로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61조
3. 부설주차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 (다만,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하는 건축물)	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검토 (건축협의) 2.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6조, 제19조 · 같은 법 제8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2조
4.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	1.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2.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3.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처리 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변경 등 신고 및 관리 5. 기계식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19조의6, 제19조의7, 제19조의8 · 같은 법 제19조의9, 제19조의10, 제19조의12 · 같은 법 제19조의13 · 같은 법 제19조의14부터 제19조의19까지 · 같은 법 제29조, 제30조

[도로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도로 등의 연결 및 도로의 점용허가	1. 도로점용 허가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및 변경 허가 3. 진출입로의 연결허가 4.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법」 제61조 · 같은 법 제52조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62조
2. 도로점용허가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원상회복 2. 점용료의 징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제73조 · 같은 법 제66조
3.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 위반을 하였을 때에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1. 도로점용 허가의 취소 2.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제63조 · 같은 법 제96조
4.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공익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권한	1.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제97조
5.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법정도로의 응급복구 2.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3. 도로 소파보수 4.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법」 제31조
6. 시유지 관리	1. 시유지 재산관리 및 사용수익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7.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노상적치물 정비 2. 과태료의 부과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법」 제61조, 제75조 · 같은 법 제117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변상금의 징수	· 같은 법 제72조
	4. 원상회복	· 같은 법 제73조
	5. 행정대집행	· 같은 법 제74조
	6. 이행강제금	· 같은 법 제100조
8.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허가(공동구를 제외한 도로부속물에 한한다)	· 「도로법」 제36조
	2.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공익을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96조, 제97조
	3. 청문의 실시	· 같은 법 제101조
9. 사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사도 개설허가	· 「사도법」 제4조
	2. 사도 개설허가의 취소	· 같은 법 제14조
	3. 처분 및 조치	·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10. 도로 표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	1. 도로 구조의 보존 및 도로표지설치 및 관리	· 「도로법」 제55조
11. 자전거이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유지·관리)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도시개발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다음의 권한 및 불법행위 단속(GB 제외)	1.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 건축 연면적의 2,000제곱미터 이하, 6층 이하) 2. 건축에 관한 구청장 신고·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행위(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6층 이하) 3. 공작물의 설치 4. 토지 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5.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녹지·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이 아닌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6. 불법 개발행위 단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같은 법 제133조

[농업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농지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전용 신고 2. 농지전용 변경신고 3. 전용허가의 사후관리 및 불법 전용농지 단속 4. 농지전용 신고의 취소 5. 농지전용 신고의 용도변경 승인 6. 농지(신고)의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및 변경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3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같은 법 제39조 및 제4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36조
2. 농지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처분의 의무 통보 및 부과 2. 농지처분 명령 및 매수 청구 3.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지정 4.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5. 농지임대차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제23조
3.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및 열람 교부에 관한 사항	1. 작성 및 비치 (구 농지원부 포함) 2. 교부 및 열람 3. 자경증명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제49조 · 같은 법 제50조 · 같은 법 제5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농산유통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동물보호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영업의 등록 (동물장묘업 제외) 2. 영업의 승계 및 취소 (동물장묘업 및 동물생산업 제외) 3.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등 (목줄, 배변 관리) 4. 벌칙 및 과태료 (동물장묘업과 동물생산업을 제외한 영업 및 목줄, 배변에 관한 위반)	• 「동물보호법」 제33조 • 같은 법 제35조, 제38조 • 같은 법 제13조제2항 • 같은 법 제46조, 제47조

[녹지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공원·녹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원·녹지 관리 (미조성 도시공원·녹지 포함) 2.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3. 점용료의 징수 4.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 5.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불법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6.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허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6조 · 같은 법 제24조, 제38조 · 같은 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 같은 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 같은 법 제49조 및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 같은 법 제27조
2. 산림자원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입목벌채 허가 2. 입목벌채 신고 3. 임산물의 굴취·채취 허가 4. 병해충 등의 예방·구제 5. 산림정화구역 내 시설의 설치 6. 임산물절취·불법입목벌채·굴취·채취 등 단속 및 사법처리 7. 입목벌채신고 및 산림오염 방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 「산림보호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 · 같은 법 제7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8. 불법산지전용(산지전용 허가지 외) 등 산지불법행위 단속 및 사법처리 9. 포상금의 지급(불법신고자) 1.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2.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3.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등에 대한 허가 4. 사상자 보상금 지급 5. 입산허가 6. 방화 및 실화범 처벌 7.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55조 · 「산지관리법」 제46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 「산림보호법」 제3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57조

[생태하천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1. 공유수면 관리 2. 공작물의 신·개축 변경, 제거 허가 3. 접속토지의 수면 이하로의 굴착허가 4. 준설, 굴착허가 5. 인수 및 수주허가 6. 토석, 사력채취, 식물재배 및 벌채허가 7. 토석, 절개 등의 투기나 수심에 영향을 미칠 행위허가 8. 호안 방파제 등의 시설물 점용허가 9. 그 밖의 점용허가 10. 점용허가에 대한 고시 11.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조사 및 질문 12. 공유수면의 장애물 제거명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3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5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6호, 제7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8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9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0호, 제11호 • 같은 법 제8조제6항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제55조제1항
2.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권리·의무에 관한 권한	1. 점용료,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2. 점용료, 사용료의 부과 감면 3. 점용료, 사용료의 강제징수 4. 원상회복의무 명령 면제 승인 5. 권리의무의 이전허가 6.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처리 7. 허가기간 연장허가 8. 공사의 착공, 준공신고 처리	• 같은 법 제6조 • 같은 법 제13조제1항 • 같은 법 제13조제1항 • 같은 법 제13조제8항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처분에 관한 권한	1. 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2. 효력의 정지처분, 원상회복, 손해방지 시설의 설치	· 같은 법 제19조 · 같은 법 제21조
4. 소하천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2. 소하천의 점용 등 3. 허가의 제한	· 「소하천정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같은 법 제15조
5.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소하천의 정비와 유지관리 2. 주민의견의 청취 3. 토지 등의 수용 4. 원상회복 의무 5.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처분 6.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청문 7. 허가의 실효 8.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9. 점용료 등의 징수 10.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11. 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12. 소하천공사 준공검사 13. 소요공사비의 예치 14. 점용 등의 신고 15. 소하천 정비 상태의 점검	·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6항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6. 시유지 관리	1. 시유지 사용허가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부터 20조까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7. 하천구역 또는 하천시설 내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 2. 사고조사 등 3. 보고·검사 등 4. 과태료 부과·징수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16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31조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민원여권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주민등록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 가.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나.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회수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법」 제2조

[징수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시세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다 음의 권한	1. 시세납세증명서 발급 2. 시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징수법」 제5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조

[복지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사항 2. 자활에 관한 다 음의 권한	1. 의료급여증 발급, 반납 및 회수 1. 생계급여의 조건제시 방법 및 결과 통지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노인복지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기초연금에 관한 사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연금신청, 변경신고 1. 매장· 화장· 개장의 신고 2. 매· 화장 신고필증 및 납골 증명 3. 공설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4. 묘적부의 비치 및 관리	• 「기초연금법」 제10조 및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0조 •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장애인복지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장애인 보호 관리	1. 장애인의 등록·등급 조정 신청 및 장애 진단의뢰 2. 장애인 등록증의 교부 등 3. 장애 상태의 확인 및 등록증 반환 명령 4.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5.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건축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물대장 발급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신 설>		[도시디자인담당관]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 법 규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 관련 허가·신고 및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공공기관의 공공 목적 광고물을 포함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23조, 제29조 · 같은 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2.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제37조
			3.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0조의3까지,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5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 같은 법 제10조의4,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5조
5.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의 취소		
6. 허가, 신고,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 및 변경, 휴업 등 신고에 관한 사항		
8. 옥외광고사업 손해배상 책임보험의무가입에 대한 관리 및 조치		

[녹색도시담당관]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자전거이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유지·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민안전담당관]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 (생 략)	• 「민방위기본법」

<삭 제>

[시민안전담당관]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2~4. (생략)	2~3. (생략)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	-----------	------------------------

[재난대응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1~3. (생략)	
2. (생략)		

[행정지원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 음의 권한	1. 연가계획 및 허가 2. 병가 및 공가 허가	·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
2. 그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청	· 「지방공무원법」 제39조
(다만 구 신설 폐지)	2. 공무원의 진(출)입 제청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

2~4.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제19조, 제21조
---------------	---------------	------------

[재난대응담당관]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1~3.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행정지원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 음의 권한	1. 연가계획 및 허가 2. 병가 및 공가 허가	·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제7조의6
<삭 제>		

<p>분협이 있을 때에는 「고양시 지방공 무원 인사관리 규 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함)</p>		<p>의2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27조의5</p>
<p>3. 6급 이하 공무원 에 대한 다음의 권한</p>	<p>1. 6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 진보 (구간 진보 제외) 2.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 진보,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징계(다만, 구간 진보 및 6급과 동 일 건으로 관련된 7급 이하의 징계, 구를 달리하는 7급 이하의 징계는 제외)</p>	<p>· 「지방공무원법」 제6조</p>
<p>4. 청원경찰 배치</p>	<p>1. (생 략)</p>	<p>·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5조</p>

<신 설>

[인적자료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별 구
<p>1.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p>	<p>1. 6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 진보 (구간 진보 제외)</p>	<p>· 「지방공무원법」 제6조</p>

<삭 제>

<p>2. 청원경찰 배치</p>	<p>1. (현행 제4호와 같음)</p>	<p>·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6조</p>
-------------------	------------------------	-------------------------------

다음의 권한

2.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 전보,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징계(다만 구간 전보
및 6급과 동일 건으로 관련된
7급 이하의 징계 구를 달리는
는 7급 이하의 징계는 제외)

• 같은 법 제6조

[일자리정책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국내 유류직업소개사업 현황 보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5.~6. (현행과 같음)	

[소상공인지원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48조, 제66조

[일자리정책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략)	1.~3. (생략)	
	4. 국내 유류직업소개사업 실적 및 사업현황 보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5.~6. (생략)	

[소상공인지원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략)	1.~4. (생략)	
2. (생략)	1. (생략)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 (생략)	• 같은 법 제41조, 제58조

	3. (생 략)	
[세 정 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 (생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같은 법률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5조까지
	2.~5. (생 략)	
[부지 정 책 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 (생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2. (생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제9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3. (생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17조 및 제18조

	3. (현행과 같음)	
[세 정 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2.~5. (현행과 같음)	
[부지 정 책 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23조
	2.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제9조 및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3.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17조, 제18조

2. (생략)	1.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의료급여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 같은 법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 「의료급여법」 제23조 •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3. (생략)	1. (생략)		3.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8조, 제13조
3. (생략)	1. (생략)		4. 긴급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긴급지원대상자 신청·접수 및 사후조사 실시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2. (생략)	1. (생략)			2. 긴급지원대상자 급여(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 해산, 장제, 잔기요금) 지급 및 보장비용의 환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신설>	1. (생략)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6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5. <u>노숙인 등의</u> <u>처리에 관한</u> <u>다음의 권한</u>	1. <u>노숙인 등의 응급조치</u>	제2조의3 · 「 <u>노숙인 등의 복지 및</u> <u>자립지원에 관한 법률</u> 」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6. <u>국민기초생활보장에</u> <u>관한 다음의 권한</u>	1. <u>기초생활수급자 조사(지환)</u> <u>보고</u> 2. <u>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환)</u> <u>지급</u>	· 「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 제22조 및 제23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삭 제>

<신 설>		
<신 설>		

[찾아가는복지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u>긴급지원에 관한</u> <u>다음의 권한</u>	1. <u>긴급지원대상자 신청·접수 및</u> <u>사후조사 실시</u>	· 「 <u>긴급복지지원법</u> 」 제4조, 제8조,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 「 <u>긴급복지지원법</u> 」 제9조, 제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6조까지
	2. <u>긴급지원대상자 급여(생계·의료, 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연료·해산·장제 전·요급자금 및 보장비용의 환수</u>	

2. <u>노숙인 등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u>	1. <u>노숙인 등의 응급조치</u>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3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3. <u>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u>	1. <u>기초생활수급자 조서(지환) 보고</u> 2. <u>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환) 지급</u>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및 제23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가족정책과]			
위임사무명 (현행과 같음)	단 위 사 무 명	위임사무명 (현행과 같음)	단 위 사 무 명
[노인복지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1.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2. (생 략)	1. (생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의4 · 같은 법률 제30조, 제32조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같은 법률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9조, 제41조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24조
3. (생 략)	1. (생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률 제37조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4.~7. (생 략)	1. (생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률 제12조 ·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의4 · 같은 법률 제30조, 제32조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같은 법률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9조, 제41조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24조
3.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률 제37조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4.~7.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률 제12조 ·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장애인복지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 (생 략)	
2. (생 략)	2. (생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제6조, 제8조, 제49조, 제50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8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 · 같은 법률 시행령 제13조
3. (생 략)	3. (생 략)	

[아동청소년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생 략)		

[기후에너지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 (생 략)	· 「 <u>아취방지법</u> 」 시행규칙 제9조
2. (생 략)	2. (생 략)	· 같은 법 제10조

[장애인복지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제6조, 제38조, 제49조, 제5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8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3. (현행과 같음)	

[아동보육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현행과 같음)		

[기후에너지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 <u>아취방지법</u> 」 시행규칙 제9조
	2. (현행과 같음)	· 「 <u>아취방지법</u> 」 제10조

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3.~7. (생략) 1.~4. (생략) 5. (생략) 6.~10.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
3.~4. (생략)		
5.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1. (생략)	

[자원순환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1~8. (생략)	
2. (생략)	1.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2.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률 제9조제3항
	3.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률 제12조의3
	4.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률 제13조
	5.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률 제15조의2
	6.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률 제36조
	7.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률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3.~7.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10.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3.~4. (현행과 같음)		
5.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현행과 같음)	

[자원순환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2.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률 제9조제3항
	3.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률 제12조의3
	4.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률 제13조
	5.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률 제15조의2
	6.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률 제36조
	7.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률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3. (생 략)	1. (생 략) 2. (생 략) 1.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 리(재산관리관이 지정된 공중 화장실 제외)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u>」 제7조 · 같은 조례 제15조 · 「<u>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u>」 제6조 및 제8조 · 같은 법률 제9조 · 같은 법률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률 제16조 · 같은 법률 제19조
----------	--	--

[식품안전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 (생 략) 2.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신고) 3.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제37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같은 법 제39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3.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u>」 제8조 · 같은 조례 제19조 · 「<u>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u>」 제6조 및 제8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9조
4.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1.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 리(재산관리관이 지정된 공중화장실 제외)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조례 제19조 · 「<u>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u>」 제6조 및 제8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9조

[식품안전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신고)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제37조제항 및 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같은 법 제39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4. (생략)	1. (생략) 2.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같은 법 제78조부터 제82조까지 	4.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조까지, 제101조, 제102조
	3. 5. (생략)				
5. 기타 식중독 등 식품위생 관련 추진업무	1. 식중독 발생 관리 및 음식문화개선(모범음식점) 등 각종 시책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위생법」 제47조, 제86조,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93조 	5. 그 밖에 식중독 등 식품위생 관련 추진업무	1. 식중독 발생 관리 및 음식문화개선(모범음식점) 등 각종 시책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위생법」 제47조, 제86조,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1조,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93조
6. 공중위생영업 영업 신고에 관한 다 의 권한	1. 영업 신고 및 폐업신고(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3조3항 	6. 공중위생영업 영업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영업 신고 및 폐업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3조의3까지
	2. 지위승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 제3조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
7. (생략)	1. (생략)		7.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8. (생략)	1.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8.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2. (생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u> · <u>같은 법 제11조, 제11조 제2항, 제11조제6항</u> · <u>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u>
3~4. (생 략)	
9. (생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 <u>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u>
10. (생 략)	1.~2. (생 략)
11. (생 략)	1~2. (생 략)
12.~15. (생 략)	3. 영업자 <u>지위승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같은 법 제6조</u> · <u>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u>

[문화예술평가]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 공연장업의 등록(변경) 및 <u>등 록</u> <u>필증</u> 의 재교부	· 「공연법」 제9조 · <u>같은 법 시행령 제8조</u>
2. (생 략)	2.~5. (생 략) 1. (생 략)	

2.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u> · <u>같은 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6</u>
3.~4.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 <u>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u>
10.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12.~15. (현행과 같음)	3. 영업자 <u>지위승계</u> <u>신고</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같은 법 제6조</u> · <u>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u>

[문화예술평가]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 공연장업의 등록(변경) 및 <u>등 록증</u> 의 재교부	· 「공연법」 제9조 · <u>같은 법 시행령 제8조</u>
2. (현행과 같음)	2.~5.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신고필증 반납 및 보고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조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제1호, 제5호, 제5호의2	2. 폐업 및 직권말소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조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 제2항제1호·제3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같은 법 제26조제3항 · 같은 법 제36조제1항 · 같은 법 제41조제1항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5조 · 같은 법 제46조 · 같은 법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1. (생 략)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같은 법률 제26조제2항 · 같은 법률 제36조제1항 · 같은 법률 제41조제1항 · 같은 법률 제42조 · 같은 법률 제45조 · 같은 법률 제46조 · 같은 법률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1. (현행과 같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같은 법 제26조제3항 · 같은 법 제36조제1항 · 같은 법 제41조제1항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5조 · 같은 법 제46조 · 같은 법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26조제3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36조제1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41조제1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42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45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46조
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제작업 배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료 중의 교부·개신 교부	· 같은 법률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8.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의 신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신고중·등록중의 교부, 변경신고·변경등록	· 같은 법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9.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제작업 배급업의 영업 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률 제63조	9. 비디오물제작업자·배급업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영업 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 제63조
10.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제작업 배	· 같은 법률 제64조	10.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 같은 법 제64조

기업의 폐업신고 및 작권발소		및 작권발소
11.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제작업자, 배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및 비디오물 수거 등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률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 제67조, 제88조, 제70조
12.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교육 및 모범업자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률 제88조부터 제99조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 제88조, 제89조
13. 과태료 부과 ·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률 제98조 제9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 제90조
14. 수수료 책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률 제9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 제98조, 제99조
1. 게임물관리사업자 교육, 모범 게임 제공업소 지정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2.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 변경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률 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 제25조
3.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률 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 제26조
4.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률 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 제29조
5.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폐업 작권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률 제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 제30조
6.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률 제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 제31조
7.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률 제35조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 제35조, 제36조,

대한 영업폐쇄 등 행정 조치(영업정지, 허가, 등록취소, 영업폐쇄, 과징금 부과, 청문)	제37조까지 및 제40조
8. (생략)	같은 법률 제38조
9. (생략)	같은 법률 제48조
1. (생략)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같은 법률 제16조제2항
3. (생략)	같은 법률 제18조
4. 신고증·등록증 교부	같은 법률 제20조
5. (생략)	같은 법률 제21조
6. (생략)	같은 법률 제24조
7. (생략)	같은 법률 제27조, 제30조
8. (생략)	같은 법률 제28조
9. (생략)	같은 법률 제29조
10. (생략)	같은 법률 제36조

대한 영업폐쇄 등 행정 조치(영업정지, 허가, 등록취소, 영업폐쇄, 과징금 부과, 청문)	제40조
8. (현행과 같음)	같은 법률 제38조
9. (현행과 같음)	같은 법률 제48조
1. (현행과 같음)	
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같은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
3. (현행과 같음)	같은 법률 제18조
4. 신고증·등록증 교부	같은 법률 제20조
5. (현행과 같음)	같은 법률 제21조
6. (현행과 같음)	같은 법률 제24조
7. (현행과 같음)	같은 법률 제27조, 제30조
8. (현행과 같음)	같은 법률 제28조
9. (현행과 같음)	같은 법률 제29조
10. (현행과 같음)	같은 법률 제36조

[체육정책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 (생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의6 제3항
	2. (생 략)	• 같은 법률 제17조
	3. (생 략)	• 같은 법률 제30조
	4. (생 략)	• 같은 법률 제27조
	5. (생 략)	제2항
	6. (생 략)	
	7.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호	
	8. (생 략)	• 같은 법률 제37조제3호
	9. (생 략)	• 같은 법률 제40조
		• 같은 법률 시행령 제23조
	10. (생 략)	• 같은 법률 제29조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체육정책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17조
	4.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30조
	5.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6. (현행과 같음)	제27조제3항
		• 같은 법 제33조
	7.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호	• 같은 법 제36조
	8.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37조
	9.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10.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2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도시계획정책관]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 (생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토지이용규제기본법</u>」 제10조 • <u>같은법</u> 시행령 제9조 • <u>같은법</u> 시행규칙 제2조
<신 설>		
<신 설>		
<신 설>		

[도시계획정책관]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토지이용규제 기본법</u>」 제10조 • <u>같은법</u> 시행령 제9조 • <u>같은법</u> 시행규칙 제2조 •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제4조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지구단위계획구역 위반 건축물, 공작물 단속	
3.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1.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및 공작물 설치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 <u>같은법</u> 시행령 제13조 • <u>같은법</u> 제12조제1항 • <u>같은법</u>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7조 • <u>같은법</u> 제12조제1항 • <u>같은법</u> 시행령 제16조
4.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용도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 <u>같은법</u> 시행령 제18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u><신 설></u>		

[건축디자인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5. (생 략)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 물의 증축, 개축 및 대수선, 임시시설허가 등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	치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5.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1.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행위 단속 2. 불법행위에 대한 계고 및 고발 3.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철거 등의 행정대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2조 및 제30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2조 · 같은 법 제2조 및 제30조, 제30조의2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같은 법 제2조 및 제30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6조

[건축정책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5. (현행과 같음)		

6. <u>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u>		
7. (생략)		
8.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1. (생략) 2. 건축물 안전진단 점검 및 관리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46조
9. (생략)	3.~7. (생략)	

[토지 정보 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략)	1.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4항
	2. (생략)	· 같은 법률 제122조
	3. (생략)	· 같은 법률 제124조의2 ·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삭 제>		
6. (현행 제7호와 같음)		
7.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 점검 및 관리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46조
8. (현행 제9호와 같음)	3.~7. (현행과 같음)	

[토지 정보 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2.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15조
	3.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18조

4. (생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같은 법률 제124조 제3항</u> • <u>같은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u> 	4.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같은 법 제25조의2</u> • <u>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u> • <u>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u>
2. (생 략)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같은 법 제14조</u>
3. (생 략)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같은 법 시행령 제11조</u> • <u>같은 법 제28조</u> • <u>같은 법 시행령 제20조</u>
4. (생 략)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같은 법 제6조</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같은 법 제9조</u>
	4. 과징금 과오납금 환급 및 환부 이자 지급	4. 과징금 과오납금 환급 및 환급가산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u>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u>
1. (생 략)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같은 법률 시행령 제18조</u>
3. (생 략)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같은 법률 시행령 제19조</u>

4. (생 략)	•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5. (생 략)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철도교통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신 설>		

[주차교통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4.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5.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교통정책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2.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관한	1. 불법구조 변경차량 지도·단속 2.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등록· 정비업, 매매업, 중고자동차상·상태 점검자 폐차업 등에 관한 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3.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	• 같은 법 제55조
	4.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 같은 법 제53조
	5. 자동차관리사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같은 법 제72조, 제7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

[주차교통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u>지동차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u>		
2. <u>(생 략)</u>		
3. <u>(생 략)</u>		
4. <u>부설주차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 (단,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하는 건축물)</u>	1.~2. (생 략)	
5. <u>(생 략)</u>	1. (생 략) 2.~5. (생 략)	• 「주차장법」 제19조의6부터 8까지

[도로 정책 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7. (생 략)		
8. <u>도로관리청이 아닌자의 도로공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u>	1.~3. (생 략)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삭 제>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현행 제3호와 같음)		
3. <u>부설주차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 (다만,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하는 건축물)</u>	1.~2. (현행 제4호와 같음)	
4. (현행 제5호와 같음)	1. (현행과 같음) 2.~5. (현행과 같음)	• 「주차장법」 제19조의6, 제19조의7, 제19조의8

[도로 정책 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7. (현행과 같음)		
8. <u>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u>	1.~3. (현행과 같음)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9.~10. (생 략) <신 설>		

[도시정비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p>1.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 건축연면적의 2000평방미터 이하, 6층 이하)</p> <p>2. 건축에 관한 구청장 신고·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행위(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하, 6층 이하)</p> <p>3. (생 략)</p> <p>4.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p> <p>5.~6. (생 략)</p>	<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p> <p>• 같은 법률 시행령 제51조</p>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9.~10. (현행과 같음) 11. 자전거이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유지·관리)	<p>•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p>

[도시개발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p>1.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 건축 연면적의 2000제곱미터 이하, 6층 이하)</p> <p>2. 건축에 관한 구청장 신고·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행위(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6층 이하)</p> <p>3. (현행과 같음)</p> <p>4. 토지 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p> <p>5.~6. (현행과 같음)</p>	<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p> <p>•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p>

- 91 -

	조외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규정」 제13조 내지 제15조 	조외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규정」 제13조 내지 제15조
	3.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철거 등의 행정대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 제2조 및 제30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규정」 제16조

[녹지 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 (생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6조 같은 법률 제24조, 제38조 같은 법률 제41조부터 제43조 까지 같은 법률 제45조부터 제47조 까지 같은 법률 제49조 및 제53조 부터 제56조까지 같은 법률 제27조
2. (생 략)	1. (생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지원의 조성 및 관리에

--	--	--

[녹지 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6조 같은 법 제24조, 제38조 같은 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같은 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3조 부터 제56조까지 같은 법 제27조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3. (생략) 4.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대 음의 사항	관한 법률」 제36조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2. (생략)	· 같은 법률 제36조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3. (생략)	· 같은 법률 제36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4~6. (생략)	
	7. (생략)	· 같은 법률 제79조 · 같은 법률 시행령 제73조
	8~9. (생략)	
	1~7. (생략)	

[생태하천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1. (생략)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같은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관한 법률」 제	2. (생략)	

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 같은 법 제7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9.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삭제>	1~7. (현행과 같음)	

[생태하천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1. (현행과 같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2. (현행과 같음)	

4조에 따라 시 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있 어서의 다음의 권리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6. (생 략) 7. (생 략) 8. (생 략) 9. (생 략) 10. (생 략) <신 설>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 같은 법률 제8조제1항제3호 • 같은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 같은 법률 제8조제1항제6호, 제7호 • 같은 법률 제8조제1항제8호 • 같은 법률 제8조제1항제9호 • 같은 법률 제8조제1항제10호, 제11호 • 같은 법률 제8조제6항 •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률 제55조제1항 • 같은 법률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 같은 법률 제8조제1항제3호 • 같은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 같은 법률 제8조제1항제6호, 제7호 • 같은 법률 제8조제1항제8호 • 같은 법률 제8조제1항제9호 • 같은 법률 제8조제1항제10호, 제11호 • 같은 법률 제8조제6항 •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률 제55조제1항 • 같은 법률 제6조
2. 제1호에 따라 허가 를 받은 자에 대 한 다음의 권한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률 제13조제1항 • 같은 법률 제13조제1항 • 같은 법률 제13조제7항 • 같은 법률 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률 제13조제1항 • 같은 법률 제13조제1항 • 같은 법률 제13조제8항 • 같은 법률 제21조 • 같은 법률 제16조
	2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권리·의무에 관한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4.(현행과 같음) 5. 권리의무의 이전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11.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조사 및 질문 12. 공유수면의 장애물 제거명령

<p>3. 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p> <p>4.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의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p>	<p><신 설></p>			<p>6.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처리</p>	<p>• 같은 법 제21조</p>
	<p><신 설></p>			<p>7. 허가기간 연장허가</p>	<p>• 같은 법 시행령 제8조</p>
	<p><신 설></p>			<p>8. 공사의 착공, 준공신고 처리</p>	<p>• 같은 법 제17조, 제18조</p>
<p>5.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조사항목</p> <p>6. 공유수면의 장에 물 제기 명령</p> <p>7. 공유수면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p> <p>8. 제7호 내용의 표지 설치 공고와 이의 변경 취소</p>	<p>1. 허가의 취소</p>	<p>• 같은 법률 제19조</p>	<p><삭 제></p>	<p>1 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p>	<p>• 같은 법 제19조</p>
	<p>2. (생 략)</p>	<p>• 같은 법률 제21조</p>	<p>점용·사용 관련 처분에 관한 권한</p>	<p>2. (현행과 같음)</p>	<p>• 같은 법 제21조</p>
	<p>3. 공작물 등의 개축허가·기타의 처리</p>	<p>• 같은 법률 제21조</p>	<p><삭 제></p>	<p><삭 제></p>	
<p>9. (생 략)</p> <p>10. (생 략)</p>			<p><삭 제></p>		
	<p>1.~3. (생 략)</p>		<p><삭 제></p>		
	<p>1. (생 략)</p>	<p>•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4항</p>	<p><삭 제></p>	<p>4. (현행 제9호와 같음) 1.~3. (현행과 같음)</p>	

2~4. (생 략)	5. <u>법령위반자</u> 등에 대한 처분	
6~11. (생 략)	12.<삭 제>	
13~16. (생 략)		
11. (생 략)	1. (생 략)	• 「 <u>공유재산관리조례</u> 」 제18조
12. (생 략)		부터 20조까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세정파]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해당 동에서 발행하는 세외수입의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 및 감액결정	•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 제4조제2항

[정수과]

5. (현행 제10호와 같음)	1. (현행과 같음) 2~4. (현행과 같음) 5. <u>법령 위반자</u> 등에 대한 처분 6~11.(현행과 같음) <삭 제>	• 「 <u>소하친정비법</u> 」 제3조제6항
6. (현행 제11호와 같음)	12.~15. (현행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 1. (현행과 같음)	• 「 <u>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u> 」 제18조부터 20조까지
7. (현행 제22호와 같음)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삭 제>

[정수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 (생 략)	• 「지방세 징수법」 제5조
	2. (생 략)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7조

[복지 정책 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 의료급여증 연도별 제시용 확인	• 「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
	2. 의료급여증 교부, 반납 및 회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신 설>		

[찾아가는복지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자활에 관한 다 음의 권한	1. 생계급여의 조건제시 방 법 및 결과 통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장애인복지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	-----------	---------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지방세징수법」 제5조
	2. (현행과 같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조

[복지 정책 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현행과 같음)	<삭 제>	
	1. 의료급여증 발급, 반납 및 회수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5조
2. 자활에 관한 다 음의 권한	1. 생계급여의 조건제시 방법 및 결과 통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삭 제>

[장애인복지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	-----------	---------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 략)	1.~2. (생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8조
	3. (생 략)	
	4~5. (생 략)	

[건축디자인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생 략)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3. (현행과 같음)	
	4.~5. (현행과 같음)	

[건축정책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현행과 같음)		

00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⑤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건축물의 배치도와 입면도에 광고물등의 위치·면적·크기 등을 표시한 설치 계획을 작성한 것을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 ⑧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허가·변경허가의 신청: 10일
 2. 신고·변경신고: 5일
- ⑨ 시장등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⑩ 시장등이 제8항 및 제9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하여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1항·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방법 외의 방법

을 이용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광고물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하되, 시장등과 광고물등의 설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배분비율, 용도, 그 밖에 수익금의 배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위치·규격·디자인 등 설치기준과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고물등의 심미성·창의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 및 도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시장등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시장등이 제8항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직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경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시장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옥외광고사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3조(허가 취소 등)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고물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방법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금지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4.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5.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물에 표시금지 내용을 표시한 경우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 광고물등을 사용하여 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광고물등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등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시장등은 옥외광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의2.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이 법을 위반한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벽면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2.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돌출간판”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 3.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공연간판”이라 한다)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 4.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옥상간판”이라 한다)
- 5.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지주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 6.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이하 “애드벌룬”이라 한다)
- 7. 제3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다만, 제17조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8. 제3조제12호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다만,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9.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다만, 가목, 나목 및 라목의 교통수단에 제19조제5항제2호의 사항을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
 -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한다)
 - 다. 항공기등 중 비행선(이하 “비행선”이라 한다)
 -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
- 10.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이하 “선전탑”이라 한다)
- 11. 제3조제15호에 따른 아치광고물(이하 “아치광고물”이라 한다)
-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 가.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
 -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다.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13. 제3조제17호에 따른 특정광고물(이하 “특정광고물”이라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2.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2. 삭제 <2016. 7. 6.>

3.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4.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5.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5의2.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7.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벽보

9. 전단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제6조(허가·신고 대상 지역·장소 및 물건)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란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이란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장소 및 물건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을 첨부한다.

③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한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광고내용은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1항제3호의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2.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그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면서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연장된 표시기간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연장된 표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작한다.

1.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

2. 제3항의 경우: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

②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물주는 그 건물에 간판 및 게시시설의 표시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이하 “간판표시계획서”라 한다)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판표시계획서에는 표시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표시 위치 또는 장소(건물 입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영에 따른 표시방법에 맞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간판은

제외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경고·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또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표출하여야 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4. 국가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

5.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6. 기상특보·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7. 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국가안보·범죄신고 홍보를 위하여 청사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한 면의 면적이 12제곱미터 이내이고, 각 면의 합계면적이 24제곱미터 이내인 간판으로 한정한다)

9. 교통법규 위반 단속 또는 도로·교통시설의 정비·점검 업무를 수행 중인 차량에 해당 업무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내전광판 및 표시 홍보물

④ 국가등은 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4. 삭제

5.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는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 장소·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

2.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4.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제2항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④ 시장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

호서식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1.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②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일반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광고물등의 재산적 가치가 아주 낮은 경우 등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① 시장등은 제40조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그 시·군·구에 귀속된다.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

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이란 별표 6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2.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6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해주었으면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5조(변경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46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옥외광고사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등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7조(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잃어버려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1.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등록증

2. 재개업의 경우: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등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재개업 신고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1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52조(행정처분의 통보)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다른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①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옥외광고사업자가 다른 시장등의 관할구역에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① 자전거이용시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정비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도회의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인사교류) 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도회의의 의장은 해당 시·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다른 기관 간, 해당 시·도와 관할 구역의 시·군·구 간, 관할 구역의 시·군·구 간, 해당 시·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와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도회의의 의장 소속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행정안전부령 또는 시·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1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한다.

②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은 승진시험 합격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진임용 순위에 따라 임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공개경쟁승진시험

2. 시·도 단위 또는 제6항에 따른 권역별로 실시한 기술직렬 5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할 때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⑤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우수 인력의 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도회의의 의장은 해당 시·도의 다른 임용권자 또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임용권자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군·구회의의 의장은 각각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⑥ 도지사 또는 도회의의 의장은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의 생활권, 지리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시·군회의의 의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권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도지사, 시·도회의의 의장 및 교육감이 작성한다.

1. 5급 공무원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승진후보자 명부

2. 시·도 단위 또는 제6항에 따른 권역별로 실시한 기술직렬 5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승진후보자 명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인사교류)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이나 6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과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이웃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하는 경우
3. 5급 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의 선정과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상·조직상 우대할 수 있다.

1.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자의 규모(계급별 소속 일반직공무원 수에 대한 교류 공무원 수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교류직위
- ③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의회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계급별 교류비율을 정하는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계급별 교류비율이 소속 일반직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20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파견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다만,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달한 사람이 그가 재직하는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에 관하여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의한 임용이 인정되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거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 정한다.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6조(배치 및 이동)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동배치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행정청은 사업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그 사업자가 해당 행위의 중지,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이행, 그 밖에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 방안을 정하여 그 사업자에게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시정권고를 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이를 수락한 때에는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본다.

제66조(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제6호,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11조제1항제8호, 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제3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4.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32조를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한 자
 9.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밝히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2항, 제16조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통화내용 열람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한 자
 5.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후원수당의 산정·지급 명세 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계약 종료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7. 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 ④ 제5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와 관련된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① 수급권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② 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1) 18세 미만인 자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6)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다. <삭 제>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2.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4.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1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2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삭제 <2009. 2. 6.>

3.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의료급여증의 발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하여 의료급여증이 발급될 때까지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계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수급권자가 수확·보육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증을 추가로 발급받거나 의료급여증의 분실,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의료급여증(추가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추가 또는 재발급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유를 확인하여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에게 추가로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료급여의 내용이 변경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증을 회수하고, 변경된 내용에 맞는 새로운 의료급여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급여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적정여부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지급의 금액은 평가대상 의료급여기관의 전년도 심사결정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

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이 제8조의2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제공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지원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생계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現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료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5.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등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주거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주거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시거소(臨時居所)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소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임시거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거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임시거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자는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시설의 입소자 수 또는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금액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그 밖의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그 밖의 지원의 종류는 연료비 및 해산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으로 한다. <개정 2010. 3. 1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후조사 중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 이하이어야 한다.
2. 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이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③ 제2항에 따른 소득, 재산 또는 금융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에 대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④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營林業),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조수(野生鳥獸)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및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의 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보조금 및 그 밖의 금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③ 제1항에 따른 소득에서 의료비와 주거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항목은 차감할 수 있다.

제8조(재산의 범위) ① 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과 제2호나목 단서에 따른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다.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라.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마.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바.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자.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및 국채·공채 등 유가증권

나.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 다만, 「주택법」 제56조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은 제외한다.

②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는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제1호다목: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4. 제1항제1호라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5. 제1항제1호마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임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제1호바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7. 제1항제1호사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8. 제1항제1호아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9. 제1항제1호자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10. 제1항제2호: 영 제1조의3제2항 및 제4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④ 삭제 <2009. 12. 31.>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 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중대한 질병, 동사(凍死) 등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을 신고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상황, 필요한 조치의 내용 및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응급상황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상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결핵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결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급감염병·제2급감염병·제3급감염병, 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매독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장애 등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죽거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거나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2. 거리, 공원 또는 역사(驛舍) 주변 등에 방치되어 추위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폭염(暴炎)으로 인한 탈수 또는 열사병 등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부상 등 위급한 상태로써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범위는 노숙인시설 종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가 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등

2.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나. 병원 응급실 이송 및 입원 의뢰

다. 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 의뢰

라. 그 밖에 응급상황에서 노숙인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6.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7.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②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관계 기관에 위촉하거나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장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자동차·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출입국·병무·교정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

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보장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 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⑧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3조(확인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 전산망의 이용, 그 밖에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급여의 실시 등)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급여 실시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결정·공표하는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개시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급여 실시 여부의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급여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 통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가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8조의 자활지원계획(이하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해당 조건부수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의 근로능력, 자활욕구 및 가구 여건 등이 취업에 적합한 경우 그 조건부수급자(이하 “취업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취업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사업 참가에 관한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취업대상자가 참가할 자활사업을 지정하고 이를 취업대상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취업대상자의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 결과를 3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대상자가 조건 이행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의 구분기준, 조건부수급자별로 제시할 자활사업의 종류와 내용 및 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자활근로) 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有給)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한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운행차의 소음이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 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별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제2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을 담아갈 수 있는 포장용기 비치 등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을 담아갈 수 있는 포장용기 비치 등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공유주방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등록 여부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2.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영업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폐쇄조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시물의 제거나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0조(면허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조리사가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56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삭제 <2015. 2. 3.>
- 1의2. 삭제 <2013. 7. 30.>
2.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 2의2.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3.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4. 제80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1. 삭제 <2013. 7. 30.>
2. 제3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징수

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와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시키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91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도지사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1. 제4조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2.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3. 삭제 <2018. 3. 1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3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부과·징수한 과징금의 귀속 및 귀속 비율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2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4조(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2조,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

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7.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8.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9.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조리하지 말 것
10.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11.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22조, 제37조제7항·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

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집단급식소 운영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소해면상뇌증(狂牛病)
2. 탄저병
3. 가금 인플루엔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마황(麻黃)
2. 부자(附子)
3. 천오(川烏)
4. 초오(草烏)
5. 백부자(白附子)
6. 섬수(蟾蜍)
7. 백선피(白鮮皮)
8. 사리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조·가공·수입·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併科)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삭제 <2018. 3. 13.>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3. 7. 30.>

2의2.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자

3.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자

3의2. 제4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4. 제72조제1항·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营业을 계속한 자(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2제2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제3항, 제37조제3항·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제10항, 제49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2. 제22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제1항·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출입·수거·압류·폐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삭제 <2015. 2. 3.>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5.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6.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7.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제3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营业을 계속한 자

8. 제76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7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 또는 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10. 제86조제2항·제3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 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제작업자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배급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청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2.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3. 제32조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2.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는 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 또는 시·도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과 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

2. 안전관리가 취약한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

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약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 제2항에 따른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① 제11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5조(선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先買者)”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용 토지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③ 선매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매협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⑧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이의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
2.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 1의2.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2.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3.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

조한 자

4.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③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제55조(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정사업의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보고·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자동차사용자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3. 제2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자

4. 자동차제작자등

5. 부품제작자등

5의2. 내압용기제조자등

6. 기계·기구제작자등

7. 자동차검사대행자

8. 종합검사대행자

9. 지정정비사업자

10.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11.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12. 자동차관리사업자

13. 대체부품인증기관

14.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15. 제77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

- ②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시설·장비·자동차·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동차·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한 출입·검사가 합동으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을 기재한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해야 하거나 사전에 검사 계획이 알려지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아니할 수 있으며, 검사 후 즉시 사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2조의2(자료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7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검사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게 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확인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에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2.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
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단속을 한 경우에는 즉시 단속을 받은 자에게 단속 내용을 적은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단속을 할 때 필요하면 제67조에 따른 조합등과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에 따라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한 것을 말한다)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점검일은 별지 제82호서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전 이내여야 한다.

1. 삭제 <2005. 2. 5.>

2.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3. 삭제 <2013. 9. 6.>

4.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상태의 점검을 하는 자(이하 “성능·상태점검자”라 한다)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 등은 별표 2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지에는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매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증범위를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58조제3항에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3.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

4.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5. 자동차 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6. 매매종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⑤ 법 제5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하려는 장소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⑥ 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가 제5항에 따른 장소에서 해당 자동차의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그 조사·산정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고지에는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 범위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공사를 한 자
2. 도시·군계획시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
3.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
4.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5.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 5의2.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 5의3.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개발행위를 끝낸 후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7의2.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7의3. 제75조의4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
8.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

- 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
9.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10.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11. 제79조에 따른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자
 12.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
 13. 제84조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 기준을 위반한 자
 14.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 자
 15.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 15의2. 제8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15의3.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16. 제89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끝낸 후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8. 삭제 <2016. 1. 19.>
 19. 삭제 <2016. 1. 19.>
 20. 제130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사용한 자
 21.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 등을 받은 자
 - 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
 - 나.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 다.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라.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 마.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 바.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 사. 삭제 <2016. 1. 19.>
 22.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2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를 위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4.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 **현행 조례****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중요 이례 사항의 사전 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